

GREAT POWER STRATEGY

대한민국의 강대국 전략:
지정학, 공급망, 혁신성장

GEOPOLITICS

INNOVATION-DRIVEN
GROWTH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한민국의 강대국 전략:
지정학, 공급망, 혁신성장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서론	4	4. 한·미 동맹과 양립 가능한 한·중 관계	22
		- 한·중 정상회담 추진	22
		- 북한 문제 협력	22
		- 한·중 공급망 대화	23
		- 한·중 무역	23
		- 한·중 문화 교류 및 범죄 대응 협력	23
		- 한·중·일 협력 채널 활용	24
		- 국제 정치 속 중국 문제	24
1. 한·미의 결속 강화	9	5. 세계 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한·일 협력	25
- 정상 차원 협의	10	- 한·일 협력의 목적	26
- 한·미의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10	- 전략적 협력의 지속 필요성	26
- 복합적 대북한 전략 및 확장 억제	10		
- 중국에 대한 전략	10	6. 인도-태평양 질서 안정	28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11	- 전통적 안보 협력과 도전 과제	29
- 한·미의 실질적 협력	11	- 비전통적 안보 협력과 대응	30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전략	31
		- 동심원 협력 전략 및 경제 전략	31
		-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강화	31
2. 한·미의 공동 혁신과 경제안보	12	7. 결론	32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13		
- 한·미 방위산업 협력	13	정책 제언	34
- 한·미 에너지 협력	14		
- 글로벌 생산기지 및 혁신지대 구축	16		
3. 통합적·단계적 대북 접근	19		
- 북한의 핵 고도화와 지정학적 환경 변화	19		
- 독자적 핵무장론의 비현실성	20		
-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 플랜A와 플랜B	20		
- 북·미 협상 재개 시점	21		
- 남북 관계의 장기 목표	21		
- 대북정책의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21		

서론: 대변혁기 속 대한민국의 역할

대한민국은 단순한 적응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과거 국력의 핵심 요소가 영토와 물질적 자원이었다면, 21세기형 국력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축소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안보·경제·기술·문화 네트워크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성장했다. 지정학적 도전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 기술 등의 물질적 이익과 정체성, 원칙, 문화 등의 정신적 가치를 함께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미국과 결속하고, 북한을 견인하며, 일본과 협력하고, 중국과 연결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즉, '한미결속', '북한견인', '한일협력', '한중연결'을 추진해야 한다.

1. 세계 질서의 재편과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

1.1 국제 질서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도전

지정학적 도전과 복합적 위기

북한은 지속적인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만 봉쇄 또는 무력 충돌 가능성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차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과 중국 주도의 공급망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역할과 전략적 대응

대한민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도전 속에서 단순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지혜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인도-태평양 전략 내 핵심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안보·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안보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한·미·일 삼각 경제 및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아세안 등과의 다자 협력을 확대하여 전략적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블록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 규범 형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2 대한민국의 국력 상승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

글로벌 국력 평가 상승

대한민국은 2023년 아시아 국력 지표(Asia Power Index) 및 2024년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평가에서 세계 5위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7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첨단 제조업의 대량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UNDP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블랙핑크, BTS 등 글로벌 문화 아이콘 및 노벨 문학상 수상을 통한 소프트파워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중 글로벌 경쟁에서 일방적으로 영향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세계 질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과 책임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다.

네트워크 중심국으로 성장

인공지능, 고속철도, 전자상거래 등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축소되는 가운데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위상과 영향력의 활용 방안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 속 네트워크 중심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미래 산업에서 핵심 공급망 및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외교 허브'로서 다자 협력의 중심국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및 규범 설정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문화 강국'으로서의 소프트파워를 공고히 하기 위해, K-콘텐츠를 비롯한 한류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2. 동심원 다자주의

2.1 핵심 동심원: 미국과의 결속 강화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볼 때, 미국은 국력(power)의 중요성과 정체성(identity)의 수렴성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심원에 위치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활적 손익을 줄 수 있다. 또한 보편적 가치와 제도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의 수렴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삼자·소다자·다자 외교를 지속하면서도, 긴밀한 양자 외교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및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첨단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 미국과의 협력이 긴밀할수록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력이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삼자·소다자 외교를 병행하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유럽연합(EU), 한·미·인도, 한·미·일 등 다양한 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그 예다.

2.2 주요 동심원: 유럽연합(EU)·일본과의 협력 강화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심원에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물질적 국력과 국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 정체성의 수렴도가 높아 국익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매우 중요한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이들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의 핵심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이들과 양자·소다자·다자 협력을 하면서 한·미·유럽연합(EU) 및 한·미·일 삼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미·유럽연합(EU) 삼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표준 설정 등에서 공조할 수 있다. 일본과는 역사적 갈등 요소가 있지만, 경제·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일 협력의 틀을 적극 활용하며, 안보질서 유지, 과학기술 협력, 공급망 안정화 같은 분야에서 실효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2.3 외곽 동심원: 중국, 인도,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과의 연결

유럽연합(EU)과 일본 다음의 외곽 동심원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정치·안보적으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외교 옵션을 활용하되, 소다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관계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대한민국의 기술과 문화의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제법에 근거한 주권 존중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 규범 등을 대한민국과 공유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항해의 자유, 인권, 역사관 등 정체성과 원칙의 영역에서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섬세하게 관리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서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이 가진 전략적 공간의 제약을 냉철하게 인지해야 한다. 한·미·일 삼각 협력의 틀 속에서 한·중 관계를 조율하는 가운데 일본과 함께 미·중 간 극단적 충돌을 방지하는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하다. 한·중 관계의 빠른 개선을 바라는 희망적 사고보다는 관계 악화를 막겠다는 신중한 태도가 중요하다. 동시에 아세안 및 미·일과의 협력을 배경으로 대중국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대한민국은 중국과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안정과 번영에 공헌할 수도 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나 종전 이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의 복원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주기술, 원자력 등에서 한·러 협력의 가능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도의 경우 대한민국과 기술·경제 협력 잠재력이 크다.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인도의 삼자 협력을 활용하여 기술·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및 외교적 연대도 점점 강화해야 하며, 특히 아세안과의 협력은 중국 견제 및 경제 네트워크 강화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협력 및 한·중·일·아세안 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4 경계선 동심원: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의 교류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국력의 중요성과 정체성의 수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중동과 에너지 자원, 인프라 건설, 신재생 에너지 협력 등을 활용해야 한다. 아프리카와는 개발협력 및 기술이전, 대한민국형 경제성장 모델을 통한 연대 강화 가능성이 크다. 남미도 광물 자원과 배터리·리튬 분야 등의 신산업 협력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들과는 양자 외교와 함께

다자 외교를 활용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한민국은 국제기구 및 다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경제 협력, 개발 원조,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2.5 동심원 전략과 강대국 외교의 원칙

동심원 다자주의 전략은 강대국 외교의 신중함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무분별한 개입이나 무원칙적인 방관·무대응을 피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핵심 국익이 걸린 사안, 즉 국력의 중요성과 정체성의 수렴성이 높은 이슈에서는 군사적 수단까지 포함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반면, 국력의 중요성이 낮은 사안에서는 거리두기 전략이 바람직하다. 국력의 중요성과 정체성의 수렴성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이슈에서는 경제 원조·제재, 외교적 조치, 과학기술 협력 등의 비군사적 수단들을 명민하게 혼합한 선택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 이 전략은 국익 관점에서 물질적 국력 또는 이익의 중요성과 비물질적 정체성의 수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유연하면서도 차등적인 외교를 구사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원칙에 입각한 다원주의적 대응이 주변 국가와 공존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대하는 스마트 전략이다.

3. 안정과 혁신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전략

3.1 외교 및 안보 전략: 글로벌 안정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동맹 및 국제 다자 협력 확대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핵심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파트너로서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아세안, 인도, 호주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글로벌 안보 협력체에서 대한민국의 기여를 확대하여 다층적인 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공식 안보 지원(OSA) 도입과 국제 안보 기여 확대

대한민국의 공식 원조(ODA)는 지금까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에 한정되었다. 앞으로는 군사 원조를 포함하는 공식 안보 지원, 곧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체계를 도입하여 국제 안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OSA 도입은 기존 원조 범위를 넘어 국제 안보 환경을 능동적으로 창출하고, 규칙 기반의 공정한 세계 질서 유지에 공헌할 수 있다. OSA를 통해 우방국에 대한 방위 장비 및 군사 기자재 공여, 군사 인프라 정비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가능해진다. 특히 군민 양용(dual-use) 공항 및 항만 정비, 군사 인프라 지원은 해당 지역에서 대한민국 군 함선 및 항공기의 기항을 촉진하고, 전략적 요충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OSA의 운영 원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억제하며,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또는 무력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한 안보 지원을 공식화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안보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

3.2 경제·기술 전략: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 중심국

글로벌 공급망 강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고성능 대량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군사 공급망에서 중요한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조선 동맹(Shipbuilding Alliance)'은 전투함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 조선산업의 재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협력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남아,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방위산업의 수출 및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제고 및 연료 공급망 확보에도 공조할 수 있다. 나아가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배터리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아시아 공급망(Altasia)'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핵심 기술 동맹 구축

대한민국은 경제안보와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유사 입장 국가들과 핵심 기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방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여 글로벌 표준과 모범 사례를 설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 협력을 위한 '다자 인공지능 연구소(Multilateral AI Research Institute: MAIRI)'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대만은 'CHIP-4 동맹'을 더욱 통합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K-건설 기반 해외 인프라 개발

대한민국은 'K-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건설사의 경쟁력과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입지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민국은 G7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3 소프트파워 및 문화 외교 전략:

대한민국 브랜드 확장

K-컬처 및 문화적 영향력 강화

대한민국은 K-POP, K-드라마, 영화 등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글로벌 교육 및 연구개발 협력 확대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대학 및 연구기관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은 국제적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IT, 인공지능,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한다.

국제 규범 형성 기여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규제, 환경 보호 등 국제 규범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한·미의 결속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보가 거침없다. 폭풍 같은 속도로 고위직을 충원한 이후 충격과 공포 속에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미 경험한 바 있지만, 세계 각국은 그 준비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실정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문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석상이나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백악관과 마라라고(Mar-a-Lago) 행렬에 끼지 못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오르지 않은 데 대한 장단점은 그 평가가 엇갈린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책 변화에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나가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여년 전 쓴 도서 《거래의 기술》은 다시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고,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리는 메시지를 점검하며 저마다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과 적대국을 불문하고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 방식을 취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국익의 우선 순위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기초로 대한민국은 주고받기식 협상에 대비한 세밀한 전술적 접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 관점에서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같은 ‘죽고 사는 문제’에서 국익을 확고하게 지키는 동시에 통상 협력 같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익의 균형을 기초로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당장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미국까지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 결속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1.1 정상 차원 협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상 차원의 협이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시급한 정치적 상황이 일단락되는 대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전에도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대한민국의 관심 사항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전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1.2 한·미의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상징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차원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의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그 일환에서 전 세계 미군기지 중 가장 현대화되었고, 미국 밖의 최대 기지인 평택기지를 통한 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을 통한 안정적 주둔도 모색할 수 있다.

주한 미군 28,500명은 대한민국에 주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파하는 한편, 한·미 방위 산업 협력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논의를 포함해 국방 부문의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 등 협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도 있다. 방위비 분담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합의가 되어 있는 만큼 협상을 지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며, 우선은 대한민국 국방비 증대 및 미국 무기 구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다.

1.3 복합적 대북한 전략 및 확장 억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증강뿐 아니라 내부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어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소홀히 할 경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분명히 재확인하고, 미국과 북핵에 대한 협상 전략 공조 및 확장 억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돌연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으므로 정교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사전에 작성해 미국과 조율하며 미리 역할 분담을 협의해 둘 필요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전제로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과 함께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동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가치 감소, 북한과 중국의 지속적 소원화에서 야기되는 북한 내부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 준비는 절실한 과제이다.

1.4 중국에 대한 전략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미·중 관계 청사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소련에 대한 봉쇄 전략을 제시했던 조지 케년의 ‘장문의 전보’와 같은 지침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미·중 관계의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도록 한·미 및 한·미·일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중국을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중국은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중국의 공세적 외교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지만 중국 내 변화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경제가 시한폭탄이며, 리만 브라더스 붕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양안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도 협의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의 인도-태평양 문제 차관보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NSC 및 관계부처를 포함한 다부처 협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조기 철수를 위한 한·미 협력도 시급한 과제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포탄은 물론 병력까지 제공한 상황에서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실어 주는 힘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지원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의 전략적 제고 만큼은 막아야 한다. 또한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한 전쟁 재발을 막는 한·미 협력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종료되면 유럽 국가로의 복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영토의 75%는 아시아에 있지만 인구의 22%만 아시아 거주하고 있어 아시아보다는 유럽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중국도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증대를 꺼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1.6 한·미의 실질적 협력

미국에 투자한 대한민국 기업의 활동은 원인의 결과를 내는 만큼 양국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최대

투자국으로서 외국인 투자로 창출된 미국 일자리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국 내 대한민국 기업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 유지에 기여한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것 또한 교역의 균형적 증대를 이끌 수 있다.

한·미 양국 간의 핵심·신흥 기술 협력은 다양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및 기술, 자율로봇 등의 협력이 그것이다. 또한 양측은 달과 화성 탐사 협력, 미래 상업 우주 및 우주정거장에 관한 산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전략적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를 통한 협력도 중요한 분야이다. 양국 국민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 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도 심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 역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이익만을 고려한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취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다. 한·미·일 외교, 국방, 산업, 재무장관 회담 및 안보실장 회담의 정기적 개최는 한·미 관계의 안정적 강화를 지원하며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BRICS+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G7 확대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였던 호주, 인도와의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과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이다. 인도도 많은 문제에서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다. G7 및 쿼드 확대는 향후 한·미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모두 번국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협력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외교는 다른 수단에 의해 국내 정치의 연장이 되고 있는 만큼 양국 내에서 광범위한 공감대와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부처, 유관 기업,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포괄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한·미의 공동 혁신과
경제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기조하에서 통상 및 공급망 질서의 재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무역 불균형의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핵심·신흥 기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중 견제와 지정학 관점의 새로운 패권주의를 기반으로 외교 및 안보 측면에서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2.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전략을 이른바 신고립주의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선택적 개입주의 또는 신파권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린란드 장악 및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점령 제기 발언은 고전적인 신고립주의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전략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상·산업·외교·안보는 물론 핵심·신흥 기술 등을 아우르는 신흥 안보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흥 안보 관점에서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아젠다는 통상일 것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무역관세로 대표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활용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10~25%의 수입관세를 전격적으로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관세정책의 다음 단계는 품목별 관세 부과였다. 2025년 3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에는 미국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57개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관세 부과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에 의하면, 이와 같이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은 약 15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간접적 효과로 제3국에 대한 수출도 최대 약 9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는 실질 GDP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우회수출 역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22년 만에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더욱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전략이 철저하게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는 경직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맹국의 경우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대한 주력 산업군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 및 무역 흑자 확대 배경에는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항시 주지해야 한다. 이는 향후 한·미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 한·미 방위산업 협력

2022년 시행된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 Science Act of 2022)'을 기반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및 기술 유출 방지 정책에 부응해야 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감소하고, 반대급부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 교역은 증가하게 된 측면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관세에 대한 방어적인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보다 능동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추진할 아젠다는 방위산업 협력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함께 글로벌 조선업 경쟁력 1, 2위를 다투고 있는 조선산업 강국이다. 2023년 상반기 단일 조선소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Top 5 기업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이 있다. 이들은 R&D와 설계 그리고 생산 부문에서 최고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가스운반선 제조 역량에서도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해군 선박 제조 역량 측면에서 최고의 파트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여기에 안보 측면의 신뢰성과 해군력 운영 측면에서의 동질성 또한 제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 기업에 의한 미국 해군 선박 제조는 미국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Philly) 조선소를 인수한 바 있다. 이는 세계 최대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 우수 인력의 미국 진출은 물론 현지 우수 인력과과의 협업을 통해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선박 제조와 함께 미국

해군에 대한 유지·보수·운영, 이른바 MRO(Maintenance, Repair & Operation/Overhaul)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MRO 서비스는 국내 제조업 전반의 연계가 가능하며, 대한민국 제조업 부흥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 해군에 대한 제조 및 MRO 서비스 실현 지역에 대한 방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미국 해군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도크가 필요하며, 해상과 육상에서 시설 및 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 시설도 구축되어야 한다.

만약 방위산업 MRO 서비스가 항공으로 확산된다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부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선과 항공을 중심으로 철강 및 석유화학 등의 소재부품 기업들이 방위산업 MRO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존스법(Jones Act) 개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미국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존스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나, 개정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따라서 존스법의 존속을 염두에 두고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과 병행한 별도 협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공동 경제구역협정' 같은 조약을 체결하여 존스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양국 간 수요가 일치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한·미 에너지 협력

다음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아젠다는 에너지 협력일 것이다. 지난 2월 7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던 미·일 정상회담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에너지 협력의 단초를 제공하고있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협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즉, 일본이

알래스카에서 생산될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는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사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미국을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산 LNG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약 30억 9,300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치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를 잇는 대한민국의 4대 LNG 수입국이다. LNG와 함께 미국산 원유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미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대한민국의 2대 원유 수입국이며, 2024년에는 전체 비중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최종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함께 액화 터미널 및 송유관 건설과 채빙선 및 LNG 운송선 건조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 구성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에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특히 북극항로가 열리는 시점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LNG 분야의 채빙선 제조와 MRO 서비스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알래스카 현지에 석유화학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알래스카 LNG뿐만 아니라 원유 생산 확대를 감안한 사안으로 석유화학 인프라에 투자하고, 현지에서 생산될 석유화학 제품을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에너지 협력의 주요 아젠다는 원자력과 핵융합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 원자력의 경우 최근 정식으로 서명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가 서명하였으며,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약정에는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물론 제3국 민간 원자력 발전 지원 및 신기술 등장에 대한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약정 체결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에 있어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다각적인 협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및 핵융합 관련 양국 간 공동 기술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차세대 원자로, 소형모듈원전(SMR) 및 초소형모듈원전(MMR), 그리고 핵융합(Nuclear Fusion)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와 관련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SMR에 관한 협력은 지난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SMR 개발은 현재 진행형이며, 2030년대 초반 상용화 및 시장 선점을 목표로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면, 표준은 물론 제품 생산 및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탁월한 기초원천 기술과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MMR은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진행 중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웨일인베스트먼트, 기업은행, 삼성물산, GS에너지 등이 미국 뉴스 케일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지난 2022년 미국 USNC와 캐나다 초크리버 MMR 실증사업 상세설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MMR은 발전 용량이 10MWe 이하인 SMR로서, 모듈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설치 기간 및 비용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극지 및 오지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며 공간 효율성도 좋다. 전력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고 원자력선 엔진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핵융합의 경우, 지난 2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GA)가 체결한 국제 협력 파트너십을 참고할 수 있다. 대전시도 함께 참여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양국은 국제 공동 연구, 기술 개발, 투자 유치 및 인력 교류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협력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핵융합 분야의 기술표준 공동 수립 및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법제 개정, 펀딩 프로그램 도입, 지원 제도 수립 등을 기반으로 핵융합 상용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4 글로벌 생산기지 및 혁신지대 구축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은 대미 투자 확대를 선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텍사스의 테일러에 세워지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롯데 역시 대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투자 규모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선 쉽지 않겠지만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은 고사하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 투자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중국 기업과 경쟁하게 되면서 투자 여력이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제재 때문에 중국 시장을 상당 부분 포기하면서 대미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장담할 수 없고 수출 장벽은 높아졌으며 투자 여력은 제한적인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 확대를 통해 국익을 담보할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가장 먼저 한·미 관계를 어느

단계까지 격상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미국 주도 핵심·신흥 기술 패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안보 전략에 어느 정도까지 동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 국민의 동의 아래 한·미 양국 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협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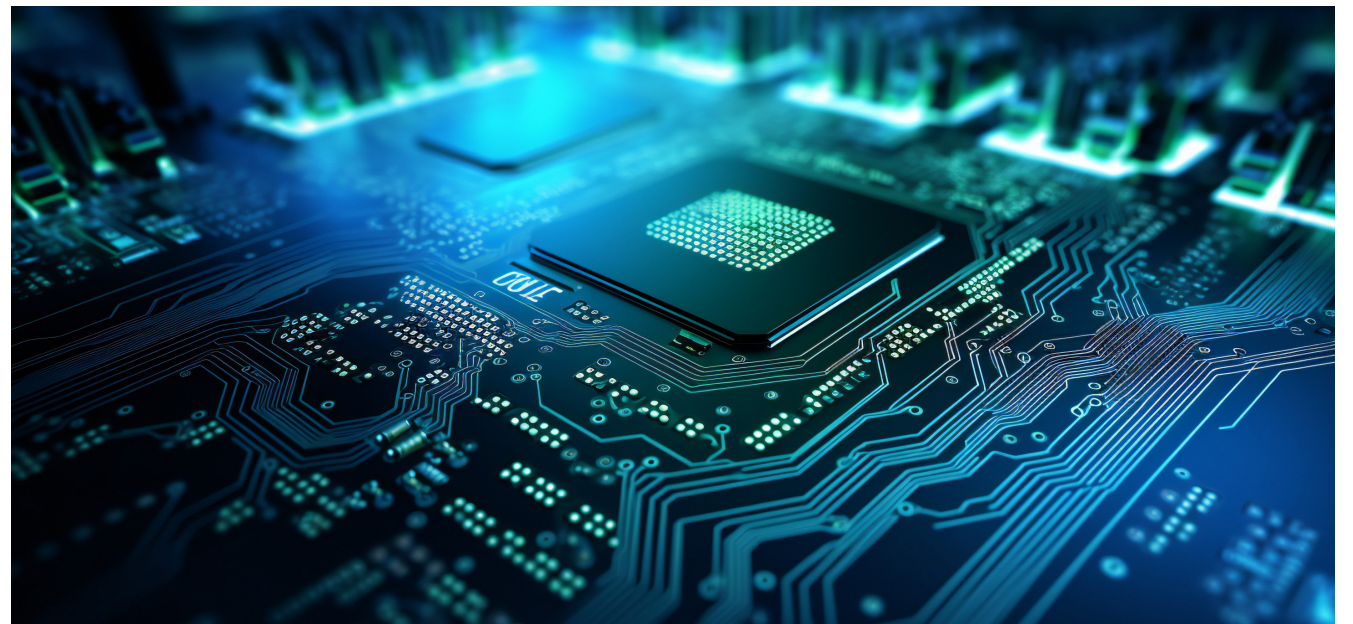
먼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국방 조달시장 참여 및 국방 R&D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2024년 2월 출범한 미국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중심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024년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라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연속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국방부에 직접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미국 정부의 접근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앞서 언급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핵심·신흥 기술을 중심으로 한 R&D 및 상용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2021년 ‘다자AI연구소(MAIRI)’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중심 AI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을 MAIRI 창립 회원국으로 제시하였다. 미국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NAIAC)’ 역시 2023년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창립 회원국 후보로 명시했으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국 간 인공지능 협력의 이론적 토대는 마련된 것이다. 양자 협력도 이미 시작되었다. 양국은 지난 2022년 ‘한·미 양자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6개 공동 연구 과제가 착수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양자 컴퓨팅, 센서, 통신 및 암호에 관한 공동 연구, 표준 선점, 상용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공동 연구 및 상용화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 내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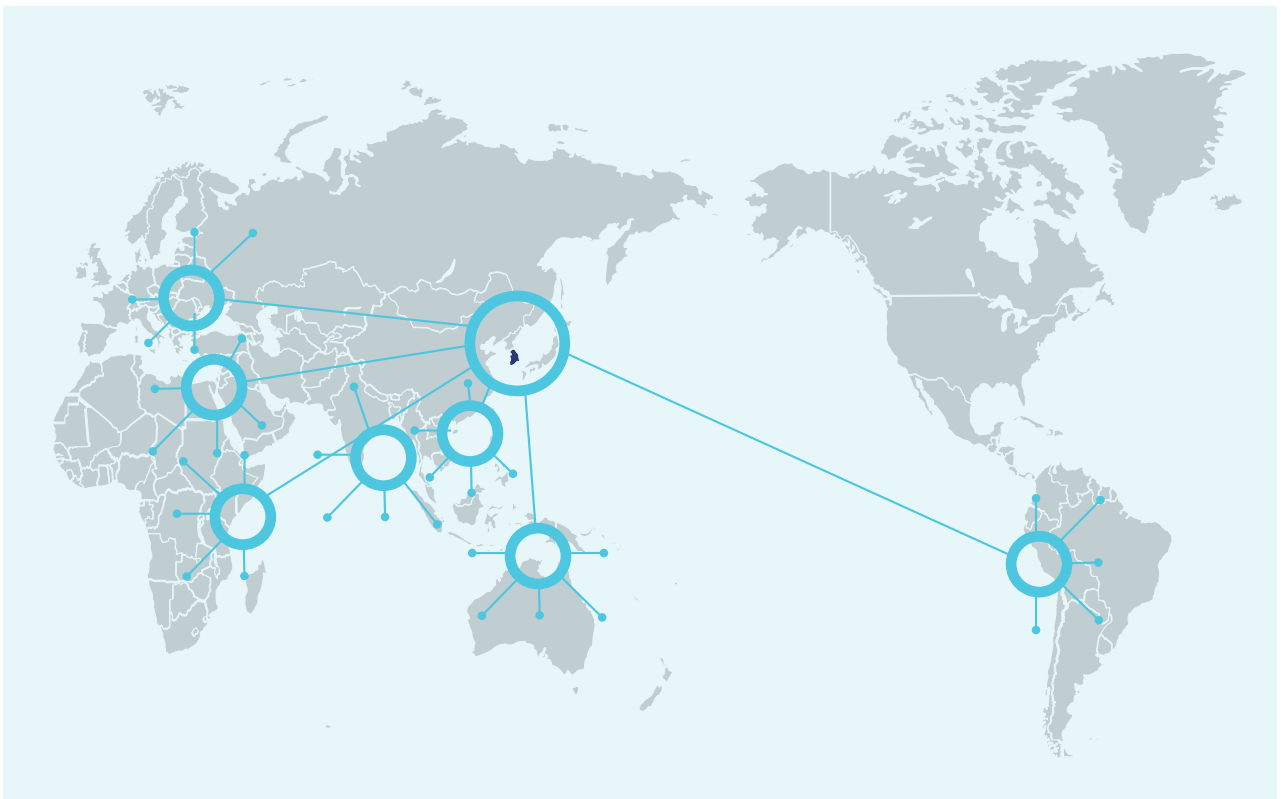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소를 미국에 세우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국내 연구자를 파견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우수 연구자를 직접 고용하고 현지 수준에 맞는 대우를 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거나 박사후 과정(Post-Doc)에 있는 유학생 및 대한민국계 미국 연구자가 최우선 영입 대상이 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연구안보를 고려하여 미국 연방정부와 함께 평판 및 신원조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존의 협력도 유지 및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1993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1차례 개최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와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에 기반을 둔 양국 간 우주 협력 활성화 방안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참여 및 기여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인도가 참여하는 ‘핵심·신흥 기술 대화(CET Dialogue)’ 역시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도와의 중장기 협력 아젠다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투자 및 생산 인프라 구축과 함께 미국 이외의 글로벌 생산 거점 구축 전략을 도모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관세 부과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유럽 주요국들,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생산-해외 수출 방식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기가 쉽지 않다. 결국 주요 글로벌 포스트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국내 제조업 시스템과 연계하는 혁신 순환(Innovation Circulation)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전략은 지난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발간했던 보고서 《경제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다중 바퀴살(Multiple Hub & Spoke) 생산기지론’을 제안했다. 자유무역주의 기조하의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이 글로벌 국경선(border line)을 넘어서는 전략이었다면, 다중 바퀴살 생산기지 전략은 글로벌 공간(space)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허브(7+4)를 구축하고, 대한민국과 각 글로벌 허브를 물류 중심으로 연계하는 전략인 것이다.



중심축과 바퀴살

최근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부 유럽 비셰그라드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중 헝가리에는 삼성SDI, SK온, 한국타이어와 같은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이들은 배터리,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IT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폴란드에는 LG화학, 현대엔지니어링, SK 이노베이션 등이 진출해 있으며, 체코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이 진출해 있다. 중부 유럽은 대한민국 기업의 생산기지이자 유럽 진출의 교두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현지에 R&D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활용하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현지에서의 기술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국가와 포괄적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및 글로벌 허브(7+4)에서 논의되지 않은 캐나다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협력의 핵심 아젠다 역시 방위산업이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one team)으로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및 독일 등과 경쟁하고 있으나, 제조 역량과 품질 그리고 통합 솔루션 제공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은 오는 5월 조선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조선 중심의 방위산업 협력은 향후 캐나다와의 북극항로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캐나다가 2100년까지 인구 1억 명의 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반의 방위산업 및 북극항로 물류 협력 강화는 미래 시장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통합적·단계적 대북 접근

3.1 북한의 핵 고도화와 지정학적 환경 변화

북한의 핵 고도화와 군사 도발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안보 리스크다. 따라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우리 정부가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협력과 상생, 통합과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 수행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비우호적이다. 북한 정권은 자국을 핵 국가로 인식하고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 질서의 변화로 북핵 문제는 지정학과 깊게 연결되었다. 이전에 국제사회가 같은 목소리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던 시대는 지났고, 오히려 러시아는 북핵을 두둔하며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 문제를 미·중 패권 경쟁이란 시각에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북한 문제의 국제화는 북핵과 지정학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 정부에 안겨 주고 있다.



3.2 독자적 핵무장론의 비현실성

북한 문제와 지정학의 연계는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정책 환경이다. 전처럼 이 둘을 분리해 생각했던 관성적 사고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지정학을 염두에 두지 않은 매우 단순한 논리에 기초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중심의 안보 정책을 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주장에 깔려 있다. 그러나 지정학이 요동치는 시대에 한·미 동맹의 근간인 신뢰를 의심으로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 우방을 늘리고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셈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투발 수단이 제한된 현실에서 북한과 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의 핵까지 억지하기는 어렵다. 북·러 밀착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핵은 기대만큼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 제재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외환 위기 이상의 심각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핵무장론은 정책 환경으로서 마땅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핵무장 추진 자체는 우리 정부가 취할 정책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3.3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 플랜A와 플랜B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플랜A로 상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2024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다음의 논리로 미국을 설득함으로써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협상, 즉 플랜B가 전개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첫째, 북한이 핵 국가로 인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더욱 비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체제 이행과 경제 발전을 통해

내부가 안정되지 않는 한, 북핵의 인정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후에 북한 문제에 집중하는 전략이 미국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도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협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간 북한을 의제로 한 대화를 조속히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정학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러 밀착이 종결되어 북한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재 또는 제재 해제는 물론, 대화, 평화 체제, 외교 관계 수립, 문화 교류, 군사적 조치, 경제 협력 등의 관여, 재래식 전력 및 핵에 대한 억지력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수단을 비핵화 단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우방국과 북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협의 주제에 따라 양자뿐 아니라 소다자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북핵 동결 협상이라는 플랜B에도 대비해야 한다. 만약 플랜B가 전개된다면 우리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수단을 복합적,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랜B의 협상 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 대한민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플랜B 자체보다 플랜B 협상 조건이 북한 문제 해결에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북핵에 대응해 미국의 핵 보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아산정책연구원은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에 대한민국이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일정한 수의 핵무기를 북핵 대응용으로 지정하여 미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된 문제를 피하면서도 북핵에 맞선 한·미 핵 대응력을 크게 제고한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

3.4 북·미 협상 재개 시점

현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가장 긴급한 우선순위가기 때문이다. 만약 종전 협상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미국 정부는 북핵 협상을 다음 과제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연내에 북핵 협상이 시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종전 협상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 경우, 미국이 올해 내에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 조건을 내세운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러시아에서 떼어 내고 푸틴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이 상황을 이용하여 미국에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며, 이를 수용할 경우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짐작할 것이다. 이처럼 북·미 협상의 재개 시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시기와 과정, 그 결과를 변수로 영향을 받겠지만, 종전 협상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연내를 넘길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3.5 남북 관계의 장기 목표

남북 관계의 장기 목표는 여전히 통일로 두되, 경제통합을 현 상태와 통일의 중간 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에 기초한 경제통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우리 국민, 특히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방안이다. 더욱이 통일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북한 체제와 맞부딪히기 때문에 남북 간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찬성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갈등을 줄이고 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제통합을 실질적인 목표로 세우고, 이를 정책을 통해 진전시키는 정책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하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상 유지와 영구 분단은 남북의 장기 종착지가 될 수 없다.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북한의 현재 주장과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되리라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6 대북정책의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우리 정부는 ‘단기는 비핵화, 중기는 경제통합, 장기는 통일’이라는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 이 로드맵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비핵화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입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핵화, 특히 군사적 억지에만 집중해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다. 군사적 억지력에만 몰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다면 남북 평화와 상생 발전, 그리고 통합과 통일로 가는 길이 자체되거나 오히려 막힐 수도 있다. 반대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할 단계에서 제재 해제나 경협을 도모하는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처럼 대북정책은 단기, 중기, 장기라는 시간별로, 또 정부 부처의 역할에 따라 영역별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대북정책은 한 레퍼토리만 계속 연주되거나 한 악기만 출연하는 독주회가 아니라 다양한 악기가 곡의 순서에 따라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한다.

북한 문제가 지정학과 연계된 만큼 대북정책도 지정학 전략과 연결되어야 한다. 요동치는 지정학 시대에 북한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실패가 예약된 무리수다. 먼저 한·미 간 큰 틀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할 시기와 방법의 조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 북·러 밀착, 인도-태평양 전략, 공급망 충격 후의 회복력, 첨단기술 발전 등에 있어 한·미 또는 한·미·일이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순서로 해야 할지 합의하고, 그 합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4

한·미 동맹과
양립 가능한
한·중 관계

중국에 대한 정책은 미국에 대한 정책과 짝을 이루어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실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블링컨 국무장관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이나, 중국이나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점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 협력하기 위해 중국과의 일정한 협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다른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대중국 외교에서는 더욱 국익에 부합하며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기업과 국민의 수요에 기초해 호혜적인 국익을 챙기는 외교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사안을 다각화하는 한편, 중국 외의 협력을 다원화하여 선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4.1 한·중 정상회담 추진

중국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이를 감안하여 한·중 정상회담에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금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상당한 격식을 갖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높아진 자존심을 고려하며 실질 협력 강화라는 실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으로 우리 정치가 안정된다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여 중요한 외교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다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은 APEC 기회를 활용해 내년에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방중은 중국의 APEC 개최 계기도 활용할 수 있고, 국익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방문을 추진할 수도 있다. 미국을 방문하는 귀로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 또한 효율적 방편이 될 수 있다.

4.2 북한 문제 협력

우리에게는 북한 문제가 항상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고도화를 저지하며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북핵 문제 논의가 철저한 실무적인 사전 협상이 없는 가운데 급물살을 탈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교한 로드맵에 따라 중국의 역할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 및 통일까지 내다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목표는 현상 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우리의 목표와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점진적인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고받기식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교적 보호권의 문제가 있지만 탈북자들의 희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희망을 수용하는 것은 인도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남북 관계에 관한 전략적인 문제이다.

4.3 한·중 공급망 대화

무역 면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아직도 압도적이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공급망의 안정성 차원에서 중요하다. 아직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 수가 많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져오지 않도록 취약점이 있는 분야에서 가능한 대로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중국에서의 수입선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점이 있는 상품의 경우 평상시 공급선을 계속 점검하고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여 혹여 차질이 생길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 간 2024년 5월 26일 서울 회담시 논의된 대로 ‘한·중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수시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 수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협의체는 양국 간 협력의 기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4.4 한·중 무역

한·중 무역은 최대한 경제 논리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절대적 영향을 갖는 중국의 정치 제도를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때 ‘한·중 투자 협력 위원회’와 ‘한·중 경제 협력 교류회’ 등 협의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첨단 반도체나 고급 조선업같이 우리의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2024년 5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 간 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한·중 FTA 수석대표 간 회의를 활용하여 한·중 FTA 후속 협상 동력을 만들어 나가며 발생 가능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철수하는 탈중국의 흐름이 뚜렷하기는 하지만, 아직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계속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상황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이 2024년 11월 발간한 《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경영환경 악화가 중국 정부의 정책(21%), 정치적 제재(15%), 외자기업 규제(11%), 불공정 정책(11%)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4.5 한·중 문화 교류 및 범죄 대응 협력

한류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은 그 자체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한·중 국민 간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우리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 내 제재 및 제한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확보함으로써 한·중의 청년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줄이는 노력이 기울일 필요도 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 진출을 위해 한·중 인문 교류 추진 위원회를 비롯한 기존의 채널도 활용할 수 있다.

한·중 간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제고를 위한 목적에서도 인적 교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11월 1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통한 한·미·일 간 협력 강화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원활한 인적 교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중 청년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중 간에는 마약, 불법도박, 보이스 피싱 등 국경을 넘나들며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양국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 5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경찰청장과 중국 공안부장 간 회담처럼 양국 치안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국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4.6. 한·중·일 협력 채널 활용

한·중·일 간 1999년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는 협력 채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8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2011년 서울에 설립된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은 한·중 간 협력을 기복없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3국 기업을 포럼은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중·일 3국 간의 보건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정보통신

장관회의, 특허청장회의 등은 각 분야에서 한·중·일 3국만이 아니라 한·중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19년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은 3국 정상회의와 장관회의의 정례적 개최, 실질 협력 증진은 물론 '한·중일+X'라는 형태로 타국과의 협력에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간 협력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타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중 관계의 안정성을 돕는다.

4.7. 국제 정치 속 중국 문제

2025년 2월 7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간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문제는 큰 관심사가 되었다.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동중국해에서 힘이나 위협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했다. 특히 양안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립각을 세웠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2024년 5월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이후 가장 중요한 성과로서 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래 무역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는 2016년 한·미 양국의 주한 미군에 대한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변곡점을 지난 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될수록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섬세한 외교는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미·중 양국이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간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는 주변국에 커다란 관심사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자 및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면서 국익을 중심으로 미·중 양국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관계로 발돋움해야 한다.

5

세계 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한·일 협력

한·일 관계는 갈등적 양자 이슈와 과거사가 얽힌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이다. 동시에 한·일 양국은 아시아의 대표적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역과 미래의 국제 질서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신중하게 도모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이는 미국의 중재와 정부 차원의 협력에 의해 추진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지지와 여러 이슈 영역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미국에서 '트럼프즘'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구조적 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단기적으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협력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한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 정치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경제적, 안보적 필요에 의해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교류 협력이 활발하고 양국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도 국내 정치적 변수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양국이 실질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5.1 한·일 협력의 목적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2024년 12월 18일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일 협력》은 한·일 협력의 목적을 공동의 위험 경감(Co-hedging), 협력적 경쟁(Co-opetition), 공동 발전(Co-development), 공동 책임(Co-responsibility)으로 요약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는 경쟁, 갈등, 위험의 영역이 있지만, 이를 최대한 경감하고 공동 대응하면서 공통의 국익을 위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을 넘어 지역과 세계의 이익에 공헌하고자 하는 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 및 안보 영역에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5.2 전략적 협력의 지속 필요성

안보 협력

대한민국과 일본은 다수의 공통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으로부터 한·일 간 공조의 필요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및 핵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한·일 안보 협력은 양국의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중국의 현상 변경 대응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상 변경 시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한·일 간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 특히 수송로의 보호에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

미국과의 3자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럽, 중동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들과의 협력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 2025년 2월에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동맹에 대한 요구와 압박도 가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한·미·일의 틀 속에서 협력과 대화는 더욱 중요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한·일 협력은 더욱 긴밀한 연계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협력 체계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 기술 분야 협력

한·일 양국은 노동시장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첨단

제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강점과 대한민국의 제조 경쟁력을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를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무역 결제에 활용함으로써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조선 및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의 탈탄소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과학기술 협력에서는 한·일 연구자 및 학생 간 공동 연구를 통해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연구를 공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칩 제조·통신·알고리즘에서, 일본이 로보틱스와 양자융합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이 수소 생산과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시장 개척 및 ODA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글로벌 기술표준 협력을 통해 비관세 장벽, 그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에 공동 대응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일본 플러스 경제, 과학,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추진

이상의 협력 분야를 고려해 볼 때, 향후 한·일 협력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글로벌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일 협력》에서 제시한 ‘한국-일본 플러스 경제, 과학,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Korea-Japan Plus Economy, Science, and Security Partnership Framework)’를 검토하고 수립할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플러스가 의미하듯이 한·일 양자 협력을 핵심으로 하되, 세부 영역에 따라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다른 국가에도 개방된 협력 구조를 지향한다. 즉, 한·일 협력이 사안에 따라 소다자 협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양국 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정치적 갈등이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용적 관점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역사 문제 및 국내 정치 변수를 고려한 유연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며, 한·일 협력의 전략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양국 정부는 정치적 갈등이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일 전략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셋째, 다양한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미·일 협력 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제도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정치 요인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많은 문제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퇴조하는 현 국제 정세 속에서 아시아에서 공고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과 세계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래를 가로막는 위중한 위협들을 함께 인식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강화해 나가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6

인도-태평양
질서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국익이 걸려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포괄적 지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무대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지역적 무대인 만큼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질서를 이루어 가는 데 대한민국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인태 전략을 개선하고 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역시 평화롭고 개방된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이 변화되고 있지만 인태 전략은 계속 추진되는 추세를 보인다. 인태전략은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처음으로 국방부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안보 인사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루비오 국무장관의 쿼드(Quad) 외교장관 회담,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미·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한 오커스(AUKUS)의 지속적 추진 등 인태 전략의 다자 플랫폼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미국은 인태 전략의 핵심인 쿼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오커스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호주에 대한 미국의 핵심수합 판매 등 군사기술 협력을 확인한 바 있다. 양자 차원에서도 미·일 정상회담, 미·인도 정상회담이 열려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목표로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필리핀 간 양자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어 양국 간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 훈련 역시 일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강제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목적과 연계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 기반 거버넌스를 추구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등 열전 지역에서의 현상 유지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면서 해양안보와 수송로 보호 등 안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미·중 양국 역시 위기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경제와 기술, 초국가 위험 등 많은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유럽과 중동 지역이 전쟁과 갈등으로 혼란 속에 있고 새로운 안보 질서를 이루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은 현재 안정적인 균형과 협력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 질서가 유지되도록 강대국 간 협력, 다양한 이슈에서의 다자협력, 규칙 기반 질서의 유지와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대한민국이 인태전략의 안보 부문에서 추구해야 할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보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여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야 한다. 초강대국 간 군사 충돌, 주요 열전 지역의 군사적 대립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될 뿐 아니라 수송로 보호를 비롯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적 차원에서 크고 작은 갈등의 규칙 기반 해결을 도모하며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남아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점차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동맹 체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질서 유지와 핵 비확산이라는 규범 측면에서도 북핵 문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여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평화적·사법적 해결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더욱 강력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다른 지역에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질서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칙 기반 경쟁과 위기 관리를 촉구하며, 가능한 분야에서 미·중은 물론 한·중 양국도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등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자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인태전략은 양자 간 협력과 더불어 다양한 소다자, 다자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익에 맞는 다양한 협력 플랫폼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자국과 지역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 전통적 안보 협력과 도전 과제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통적 안보 측면은 여러 국가들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다자적인 협력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군사안보적 현상 유지로서 군사력과 강제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규범 및 규칙 기반 질서에 의해 방지하는 노력이 핵심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군사·안보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등 4개의 열전 지대 중 동북아에 3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남중국해도 필리핀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중 하나에서 미·중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분쟁이 4개 열전 지역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중국의 군사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막고자 노력해 왔다. 미국은 자체 군사력 현대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군사 억제력을 증강했으며, 국방부와 전략가들은 중국에 대한 군사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일본, 호주, 필리핀과의 군사 협력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방법에 의한 타협과 위기 관리를 강조하고 강대국 간 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보적 현상 유지를 추구할 방법을 찾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2 비전통적 안보 협력과 대응

전통 안보와 긴밀히 연결된 부문에서 핵 확산 방지, 대테러 활동, 해양안보 강화 대응 등도 중요한 협력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국가적 신흥 안보 이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공통으로 부딪힌 문제이며, 개별적 국가 이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및 식량 안보, 신기술 규제 등과 같은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포괄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 관점에서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특수작전회의,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대테러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 유류 밀매 차단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는 테러 조직의 금융 네트워크 차단과 신기술을 활용한 대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안보 협력에서도 대한민국은 주요국과 양자 협력 및 다자 회의를 통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한·미 사이버작전사령부 훈련 및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아세안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통해 다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사이버 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주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한·호주 우주정책대화 등을 통해 주요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엔 총회 및 다자 회의에서 우주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는 민간 우주 기술과 군사적 안보 협력을 연계해 우주 감시 및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을 확대하며 초국경적 안보 위협 대응력 역시 높이고 있다. NATO 정상회의에 참여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안보, 허위 정보 대응, 신기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NATO와의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한반도 안보와 글로벌 위협 대응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북한 관련 논의를 주도하면서도 사이버 안보 및 기후안보 등 신흥 위협 대응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향후에는 글로벌 안보질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술·재정·훈련 제공을 통해 글로벌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엔 스마트캠프 프로젝트와 삼각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평화 유지 역량 강화와 분쟁 지역의 안정적 재건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 안보 및 비확산 협력을 위해 군사 AI 규범 형성, 생물·화학 무기 비확산,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한 글로벌 안보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범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생물·화학 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각별히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흥 기술과 비확산 체계를 연계한 국제 규범 정립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보건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은 아세안과 협력하여 보건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ODA를 통해 보건으로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감염병 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후변화와 공중보건의 연관성을 고려한 글로벌 보건 대응 체계를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6.3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전략

대한민국이 부딪힌 당면 과제 중 가장 큰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에 중대한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남북 간의 군사 균형에 관한 전통적 안보 문제인 동시에 핵무기의 확산과 관련된 비확산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테러 집단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는 중요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 안전 관리 문제 또한 연계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의 경제 제재 및 비확산 노력을 추진하고, 다자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6.4 동심원 협력 전략 및 경제 전략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호주, 아세안, 인도 등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역내 안정과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상대적으로 경시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 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태 전략은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며 협력적 국제 질서를 증진하는 것이므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포괄적인 관여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일본 및 호주와 협력하여 소다자 및 다자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은 인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인도의 다양한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보호주의와 관세 장벽 등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다자 협력의 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조하지만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협력,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등의 과제는 국익의 아주 중요한 분야이다.

6.5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하며, 국제 규범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지역 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대한민국이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노력은 미·일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공감대 형성 및 전략 협력 동반자로 긍정적 관계를 설정하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인태 전략은 단순히 안보를 넘어 경제, 기술, 가치 외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뿐만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대한민국, 안정과 혁신의 선도국으로

대한민국은 안보·외교, 경제·기술, 문화·소프트파워 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실천에서는 유연성을 갖지만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면서 다층적인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고,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스마트 강대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흔히 전쟁 용어로 표현된다. 무역 전쟁, 관세 폭탄,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빗댄 ‘충격과 공포’ 정책, 고위직 인선 속도전 등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51번째 주의 주지사라는 말을 듣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선포하였다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전쟁 용어란 긴급한 대응을 야기하며, 잘못 대응할 경우 그 결과가 중대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두 지역 이야기’를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에 비유한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유럽과 비교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되는 아시아를 표현하는 언급이다.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중국과의 치열한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는 것이 배경이겠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을 흔드는 행동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정부는 나침반, 방향타와 함께 확고한 컨트롤타워, 정교한 로드맵을 제공하며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활용 가능한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북한 비핵화 관련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미·북 정상회담은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기회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증강은 방지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찾기 어려웠다. 미국에서는 ‘똑같은 말(horse)을 네 번이나 구입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반복적인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따른 북한 무기에 대한 수요 감소, 미·러 관계 개선,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과거의 대북정책이 진보 진영에서는 유화적인 접근을, 보수 진영에서는 강경한 접근을 택했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화와 경협을 중시하는 접근법과 압박과 제재를 병행하는 접근법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정책은 일관된 원칙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오케스트라와 같이 적절한 순서에 따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미 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시한 한·미 조선업 협력을 비롯하여 방위산업 협력, 원전의 제3국 수출, 한·미 원자력 협정 이행 확대, 반도체 및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협력 등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는 우리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협력은 여타 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지정학적 도전은 대한민국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갈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것이다. 동심원 다자주의에 따라 핵심 동심원인 미국과의 사활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주요 동심원인 유럽연합(EU), 일본은 물론 외곽 동심원인 중국, 인도, 러시아, 동남아 국가, 그리고 경계선 동심원인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시야에 두고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때 유연하면서도 차등적인 외교를 구사하면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외교는 다른 수단에 의해 자국 내 정치의 연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다. 매일의 언론 보도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역사에 등재될 기록이 경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유희리보다 역사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초당적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국민과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들고서 오늘의 국익을 세심하게 챙기며 후세에 물려줄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책 제안

(1) 블루리본 위원회 설치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중 국제 관계가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관계는 복원될 수도 있지만,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관계도 존재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트럼프즘'의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핵심 외교·통상·안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블루리본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가 추천하는 정부·학계·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정책 건의를 수행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미·일 간 실질 협의체 구축

미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일본은 대한민국이 국내 사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입장 개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동안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2)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2+2+2)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협력, 거시경제 조율 등의 의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미·일 플랫폼을 통해 안보 협력의 패키지와 첨단 제조업의 패키지를 묶고 섞어 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3)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는 새로운 정부가 맞이하는 중요한 국제 행사이다. 하지만 호텔을 비롯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APEC

정상회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확보하는 것도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다른 정상급 인사와 주요 기업인들의 참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항공모함을 경주 인근 해역에 정박시키고 이를 미 대표단의 본대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산의 숙박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산과 경주 간 특별 KTX 및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4) 한·미 공동 혁신

대한민국은 국방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 연구 협력을 위해 '다자 인공지능 연구소(Multilateral AI Research Institute, MAIRI)'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대만은 'CHIP-4 동맹'을 더욱 통합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동시에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에 기반을 둔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 활성화 방안도 계속 논의해야 한다. 한편, 미국과의 공동 연구 및 상용화 확대를 위해서 미국 내 연구 인프라 구축 증대도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소를 미국에 세우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5) 다중 바캥살 생산기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들, 일본, 중국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생산-해외 수출 방식으로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기가 쉽지 않다. 대한민국은 주요 글로벌 포스트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국내 제조업 시스템과 연계하는 혁신 순환(Innovation Circulation)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중 바캥살 생산기지 전략은 글로벌 공간(space)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동남아시아, 동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고, 대한민국과

각 글로벌 허브를 물류 중심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6) 통합적·단계적 대북 접근

북한 문제는 '빠른' 해결보다 '바른'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지정학과 북한 문제가 연결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여 빠르게 해결하려 시도할 경우, 오히려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거나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북·러 간 밀착이 약화되는 시점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정책 환경으로서는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단기적으로 우리의 선택지가 되기는 어렵다. 독자 핵무장을 통해 오히려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 및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억지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및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7) 한·중 2+2 당·정 협의체 구성

중국은 공산당과 국가기관이 중첩적으로 운영되는 '이중궤도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결정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입법부 간 협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과의 협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이 국무원을 지휘하는 중국의 정책 결정 구조를 고려할 때, 공산당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당이 중국 공산당과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야 정당과 함께 참여하는 2+2 당·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 간 협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초당적 외교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8)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 강화

대한민국은 군사 원조를 포함하는 공식 안보 지원, 즉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체계를 도입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OSA 도입은 기존 원조

범위를 넘어 국제 안보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하고, 규칙 기반의 공정한 세계 질서 유지에 공헌할 수 있다. OSA를 통해 우방국에 대한 방위 장비 및 군사 기자재 공여, 군사 인프라 정비 등 다양한 안보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대테러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초국가적 신형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우주안보와 군사 AI, 생물·화학무기 비확산 등 새로운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글로벌 보건 협력 등에서도 책임 있는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

(9) 북극 전략 준비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기술 관련 협력은 새로운 통상 및 물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가칭, '북극 전략 보고서 2050'을 수립하여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와의 조선, 방위산업 관련 협력도 향후 캐나다와의 북극항로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 캐나다와의 협력 강화와 함께 북극 전략 차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역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복합적인 국가적 프로젝트다. 따라서 이를 총괄할 범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종전 후 진입하면 이미 늦을 가능성이 크다. 전쟁 국면부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만 본격적인 재건 붐이 시작될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진취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면, '예외적 여권 사용'에 대한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민간 기업가들이 자유로운 활동과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강대국 전략: 지정학, 공급망, 혁신성장

연구책임자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

공동연구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김형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 전 EU 대사)

송치웅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